

“1인 미디어, 윤리 규범 절실”

유성엽 의원, 윤리적 문제 해결 위한 방안 모색나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 윤리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 윤리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성엽(정음·고창, 대안신당 대표)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콘텐츠 창작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진웅 국회의원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김철현 나사렛대 방송영상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조성은 올미디어 미디어 대표, 이선명 스포츠경향 기자, 이시문 한국MCN협회 사무국장,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인 미디어의 과급력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극

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대처방안이 전무하다”며 “최소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준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므로 시장의 자율규제 쪽으로 지원하고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1인 미디어 홍수 시대에 공정한 부분은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죽이는 선별적 작업을 통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최진웅 국회의원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1인 미디어 콘텐츠가 방송콘텐츠 심의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등급분류제의 대상도 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자율 규제를 위한 법률·정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현 나사렛대 방송영상콘텐츠학과 교수는 해외의 미디어 콘텐츠 교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콘텐츠 이용에 대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 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윤리와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을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은 올미디어 미디어 대표는 콘텐츠 미디어 교육을 국가에서 진행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구조로 맡기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선명 스포츠경향 기자는 1인 미디어의 심각한 윤리 파탄의 실태를 고발하며 윤리 교육의 시급성을 설화하였다. 그리고 이시문 한국MCN협회 사무국장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윈스트라이크 이웃제나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시장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윤리규범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제된 1인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세월호 의혹’ 재수사 특별수사단 이번주 중 출범 예고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별도 수사단이 꾸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번주 중 출범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사건 관련 재수사를 진행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단장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맡았으며, 부장검사 2명과 검사 5~6명 등 10명 안팎의 검사로 꾸려질 예정이다. 특수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

고검 청사에 마련되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수사 지휘를 하게 된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사건의 구조 및 수색 과정과 이후 조사 및 수사 내용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수사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지적하며 재수사 여부를 묻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외압 사건 등 수사를 위해, 특수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고도 해상에서 약 5시간을 허비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헬기를 통한 수색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수색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송지용 도의원, 폐지 좁는 어르신 지원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가 폐지 좁는 어르신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이 발의한 ‘전북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대책 등 지

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이들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활



용품 수집인에 대해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지용 의원은 “처음이라 미흡하지만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도 차원으로 넓혀 사회적 관심과 더 큰 지원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김관진 구속 수사하고 진상 규명해야”

군인권센터 “軍수사단, 계엄문건 의혹 덮었다” 주장

일명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군 특별수사단의 단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9·공군 대령·법무 20기)을 임명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특별지시 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2016년 10월 국방비서관실 신모 행정관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장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고했다”며, “이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즉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어 “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 착안, 기무사 계엄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신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때 특수단은 문건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 수사 및 문건과 관련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 전 실장 주도 하에 준비된 이 문건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고,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 행정관을 수사하던 군검찰은 관련 혐의는 덮어버렸다”며 “대신 컴퓨터 압수 수색 과정에서 발견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신 행정관을 2018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번 제보의 핵심은 수사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라며 “전익수는 신 행정관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지었고 관련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수단 참여 인원을 전원 조사해야 한다”며 “또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 의 수단을 총동원해 계엄 문건 진상을 날이 밝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당시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징후가 포착된 것도 아니었다”며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

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무력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하지 않던 북한 급변 사태 말을 많이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군의 날 연설을 보면 북한 급변 사태가 머지 않았고 체제가 붕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계획’이 작성된 시기인 2016년 10월과 딱 맞는다”며 “희망계획을 만지작거리다가 최순실 비선실세 사태 이후 탄핵 촉구 촛불집회 기점으로 희망문건이 계엄령 문건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늘 이야기하는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해서 뒷산 밝히기 어려워서 중단했다고 하는 해명”이라며 “(수사 초점을 계엄 문건에서) ‘희망계획’으로 바꾸면 조현천에 해당하는 김관진이 국내에 있고 신병확보도 되는 데 수사를 안 했다. 실무자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은폐됐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김관진을 구속수사하고 문건과 관련된 일체의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박희승 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위촉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 박희승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위원회로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

는 등의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약 11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 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희승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천되고, 남원, 임실, 순창의 지역민의 자치분권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추진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